

농업 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

농림부, 유전자원연구소 9월 완공 ... 법률제정안은 2007년 6월 상정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종자은행이 농업분야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책임기관의 역할을 맡는 <농업유전자원 연구소(가칭)>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도 추진된다.

농림부는 농업 분야의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5월17일 발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9월 완공을 목표로 수원 서둔동에서 연면적 3350평 규모로 신축하고 있는 종자은행을 농업유전자원연구소로 확대·개편해 농업분야 유전자원의 국가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종자은행, 과수시험장, 축산연구소 등 20여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는 농업유전자원 가운데 장기 보전이 필요한 것은 농업유전자원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대학 등 민간이 보유한 유전자원도 필요하면 연구소가 장기보전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아울러 농림부는 보유 유전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기관간 정보망을 구축해 유전자원의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유전자원의 수입과 등록, 국외반출 절차 등 규정을 담은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007년 6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보전 필요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작물별 유전자위원회도 2007년 상반기 구성하기로 했다.

농림부 김남수 농업기술지원과장은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유전자원은 동식물과 미생물 등 22만4000여 점으로 보유량 측면에서는 세계 6위 수준이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활용도나 보존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진다”며 “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생명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18>